

칠레, 새 헌법에 광업 부문 환경보호의무강화 조항 삽입 예정

칠레 La Prensa Latina, Reuters, Mining.com

2022/07/01



□ 칠레가 헌법 개정안 초안에 광산 채굴 깊이와 지역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임.

- 광업은 칠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업으로, 연간 GDP의 10% 가까이를 광업 부문을 통해 창출하고 있음.
- 그러나 약 40여 년 전 아우구스토 피노체트(Augusto Pinochet) 군부 정권에 제정된 헌법은 신자유주의 사상을 대거 반영하여 민간 기업이 큰 제약을 받지 않고 광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, 그 결과 개발 과정에서 빙하 지대를 포함한 여러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음.
- 하지만 현재 개정 작업 중인 새 헌법에서는 채굴 깊이를 제한하는 한편, 빙하 등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채굴 활동을 금지하는 법적 조항을 마련하여 환경 보호를 강화할 예정임.

□ 칠레 국영 광업 기업 코델코(Codelco)가 친환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전환한다고 밝혔음.

- 칠레 국영 광업 기업이자 단일 업체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리를 채굴하는 코델코가 앞으로 지금보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강조한 경영 전략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.
- 코델코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가 최고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가브리엘 보리치(Gabriel Boric) 대통령도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, 수질 보호와 빙하 지대 보존 등 광업으로 인해 야기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델코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.

□ 칠레가 광업 부문에 환경 보호 이념을 강조하면 관련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.

- 한편, 광업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칠레의 친환경 광업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추후 칠레 광업 부문의 투자를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음.
- 이는 칠레가 헌법 개정을 통해 광업 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 광물 자원이 실질적으로 국유화되는 현상이 동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.
- 광업 업계는 구리와 리튬 등의 자원이 국유화되면, 자연히 민간 기업이 지금보다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음.